

#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

2021. 7. 5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< 안건 요약 >

### 1 검토배경

- '21년 해외건설시장 회복 전망(전년대비 12% 증가), 선진-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수요 → 기회선점을 위한 수주경쟁 심화
- 올해 우리 수주실적 147억불(전년동기(161억불) 대비 9% 감소) (6월말 기준) + 수주유형도 도급형태의 단순시공 위주 구조 지속
- \* 도급사업 비중 추이(%) : ('16) 99.3 → ('18) 96.3 → ('20) 98.2 → ('21.6) 96.0

### 2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

- ◇ ①“수주실적 제고(올해 300억불 목표달성)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”,  
②“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”를 핵심전략으로 설정
-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상기 전략의 효과적 추진 뒷받침

## [전략 1]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

### ① 금융지원 강화

- (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)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·규모 대폭 확대 및 금리·수수료 인하
  - \* (대상) 우리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요건 대폭 완화(10~51→10%)  
(규모) 기업 수주액 등에 한정 → 직간접적 수출유발 효과 등 감안하여 지원규모 확대  
(금리수수료) 친환경·인프라 등 중점 정책분야에 금리 최대 1%p 인하 및 수수료 인하
- (저신용국 지원) 수은 특별계정,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1단계\*를 적기에 완료하고, 이후 추가재원 조성을 통한 2단계 도입
  - \* 국가신용도가 낮아(B+이하) 일반계정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수주 지원 → 특별계정은 1조원, 국가개발프로젝트는 0.8조원 既조성('19~'21년)
- (기본여신약정(F/A)) 수은-UAE 국영 석유사간 50억불 F/A\*를 우선 추진하고 사우디(아람코)·카타르(QP) 등 대상기관 확대
  - \*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거래에 표준화된 대출계약 체결
- (기타) PIS펀드 조성 확대(총 3조원)\*, 수은 대외채무보증 개선, 무보 보험지원 확대(3조원), 경험증진자금(EDPF) 활용도 제고
  - \* 플랜트(P)·인프라(I)·스마트시티(S) 분야 정책펀드로 '21년 1.5조원 조성완료 목표, 이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.5조원 확대(2단계) 추진

## < 안건 요약 >

### ②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

- (기업활동 지원) 백신 우선접종 대상 확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, 불가피한 공기지연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강화 등
- (사업 타당성조사(F/S)) 내년 F/S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 확대 (발주처 요청 사업 F/S, 제안형 개발사업 제안서 작성비용도 대상에 포함)

### ③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및 추가 프로젝트 발굴

- '20.6월 既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 등이 큰 10대 프로젝트(733억불)를 선별하여 수주성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

## [전략 2]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

### ①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

- (모범사례 축적) 인프라 공기업이 기획·투자하는 민관 동반진출 해외 PPP 사업 전방위 지원 → 모범 성공사례(Track Record) 축적
  - \* 현재 공기업은 주로 운영(O&M) 단계 수주 위주의 보수적 역할 → 투자개발사업을 기획·제안하고 자금 조달하는 디벨로퍼 역할(설계/시공 등은 민간이 수행)
- (제도개선)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해 예타, 인사 등 개선
  - (예타) MDB 참여 또는 F/S 완료사업은 예타 평가시 우대, 신속예타 제도를 임의→원칙 적용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확보,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신설 등
  - (인사) 해외사업 전문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사업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
  - (평가) 공공기관 해외사업 성과가 반영되도록 경영평가 지표 설정시 해외사업 반영
- (KIND 기능강화) 법정자본금 한도액(현 0.5조원) 증액 검토, 전문인력 등 정원 단계적 확대 검토,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\*
  - \* 현재 베트남, 인니, 우즈벡, 케냐 4개국 설치 → 방글라데시 등 추가 설치

## < 안전 요약 >

### ② 민간 역량 강화

- **(PM 역량강화)** 건설 Eng 분야를 설계·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\*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 및 발주 확산 유도
  - \* PM(Project Management) :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수 과정(기획·조사·설계·조달·시공·감리 등) 또는 일부를 관리하며,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
  -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 도입, 공공기관 등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도록 장려(시범사업 등), 해외 PM 실적 확보 위해 ODA 연계 등
- **(인력 양성)**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 수립,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 교과개선, 중소·중견기업용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등

### ③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

- **(한미 협력)**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시장 진출기반 조성
  - **(G2G 협력)**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개최를 통해 제3국 공동진출, 우리 미국시장 진출, 개발금융 협력, 민간 라운드테이블 등 협력 논의 진전
  - **(정상회담 후속)** 우리 기업의 400억불 대미투자 기회 활용, 원전 협력방안 모색
  - **(현지 지원조직)**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한 “현지 지원반” 신설
    - \* 국토관(지원반장), KIND, 해건협, 코트라, 수은·무보 등 참여하여 시장조사, 유망사업 발굴 등 추진
- **(개도국 EDCF)** EDCF가 PPP 사업에 있어 사업발굴 등 수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EDCF PPP 지원체계 정착
- **(G2G 협력)** EIPP\*, K-City Network\*\*를 통한 수주기회 극대화
  - \*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(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): 3년 이상 중장기 집중지원
  - \*\*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 정부간 협력사업 발굴, 추진

### [추진체계]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

- **(해외수주협의회\*)** 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수주 점검체계 신설 등 금번 대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 점검
  - \* 기재부 1차관 주재, 국토부·산업부·외교부 등 관계부처, 정책금융기관 등 참석
- **(홍보·정보공유)** 주한 대사관 해외수주 설명회 신설 및 글로벌 컨퍼런스\* 등 홍보 강화 + 연내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
  - \*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(11월, 국토부), MDB 프로젝트 플라자(11월, 기재·산업부)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추진배경 .....                   | 1  |
| 1. 해외건설시장 전망 및 여건 .....          | 1  |
| 2. 우리 해외수주 현황 및 평가 .....         | 2  |
| II .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...     | 3  |
| 1.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.....    | 4  |
| 2.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..... | 9  |
| 3.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.....            | 17 |
| III . 과제별 추진일정 .....             | 18 |

# I. 추진배경

◇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건설시장 성장 가능성을 우리 해외수주 확대 및 고도화 기회로 활용 →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 뒷받침 필요

## 1 해외건설시장 전망 및 여건

□ 시장 회복 +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 → 기회 선점 위한 경쟁 심화

- (전망) '21년 해외건설시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본격화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기대로 전년 대비 12.2% 증가한 12.4조불 예상
  - 특히 아시아 등 개도국 개발수요\*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며, 美 신정부 인프라 투자계획(1.2조불) 등 선진국 수요 기대도 확대
- \* 코로나19 전후 개도국 개발재원 부족분은 2.5→4.2조불로 확대 전망('20.11, OECD)

< '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(IHS Markit) >  
[단위 : 억불, %]

| 구분       | 최근 전망 ('21.3) | 이전 전망 ('20.12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규모       | 124,373       | 119,450        |
| 전년대비 성장률 | 12.2          | 8.1            |



- (여건) 글로벌 차원에서 공항·철도 등 대형 인프라 확충,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 등 '대규모(Package) 투자개발사업' 확대 추세
  - 특히 개도국의 경우 기획·운영 노하우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개발형 국제입찰 활용 추세
  - 이에 따라 주요국은 민간 엔지니어링사(美·英), 종합상사(日), 인프라 공기업(中) 등 중심으로 사업 기획·선점 노력 가속화

⇒ 대형 해외사업 등 기회 선점을 위해 각국 정부는 외교수단, ODA·ECA 적극 활용 등 국가 대항 양상의 치열한 수주 경쟁 전개중

## 2 우리 해외수주 현황 및 평가

### □ **(현황)** 올해는 전년대비 다소 저조, 단순시공 위주 지속

- 우리 해외수주는 작년 반등에 성공\*했으나, 올해는 현재(6월말 기준) 147억불\*\*로 전년대비 다소 저조(전년동기(161억불) 대비 9% 감소)

\* 우리 수주실적(억불) : ('15) 461 ('16) 282 ('17) 290 ('18) 321 ('19) 223 **(20) 351**

\*\* (지역별) 중동 28%(41.3억불), 아시아 44%(64.6억불), 북미 10%(15.1억불)  
(공종별) 산업설비 65%(95.6억불), 토목 19%(28.1억불), 건축 8%(12.0억불)  
(유형별) 단순도급 96%(139.4억불), 투자개발 4%(6.3억불)

- 수주유형도 도급형태의 단순시공 위주 구조가 여전히 지속

\* 도급사업 비중 추이(%) : ('16) 99.3 → ('18) 96.3 → ('20) 98.2

- 민간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로서 전환 노력중이나, 실적 부족,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아직은 한계
- 공공부문은 국내 대규모 사업 실적 등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, 보수적 성향,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해외 투자사업 참여에 소극적

### □ **(평가)** 수주실적 제고 지원 + 고부가 사업 전환 병행 필요

- 올해 300억불 수주목표 달성 등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금융 지원,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
- 아울러 공공-민간의 역량 강화에 기반한 투자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 기회 공략 + 고부가 수주구조로 전환 필요

※ 최근 인프라 공기업이 참여한 팀코리아 수주성과를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공공-민간 공동진출 교두보가 조금씩 형성중이며,

\* 페루(친체로 공항), 카자흐스탄(알마티 도로), 폴란드(바르샤바 신공항)

- 국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공기업들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 확대 필요

## Ⅱ.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





## 1 금융지원 강화

## 1-1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

-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·규모를 대폭 확대하고, 금리·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 경쟁력 제고
- (대상) 우리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, 보유조건 등 대폭 완화\*
  - \* (기존) 우리 기업의 최소 지분 우리기업 경영권 확보 등에 따라 10~51%, 수은 대출만기까지 지분보유 필요  
(개선) 우리기업 최소 지분 10%, 완공 후 지분매각 명시적 허용
- (규모) 완공 이후 O&M 계약 가능성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·간접적 수출유발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지원 규모 확대\*
  - \* (기존) 우리기업 수주액 및 기자재 수출액으로 한정 → (개선) 우리기업 투자 지분 및 직·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
- (금리·수수료) 경쟁 컨소시엄 대비 금융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조정을 적극 활용 등 금리 우대(최대 1%p 인하), 수수료 인하
  - 탄소중립 달성, ESG 촉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친환경·인프라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 확대 검토

## 1-2 低신용국 금융지원 2단계 추진

- 新시장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한 低신용국 대상 수은·무보 금융지원 2단계를 추진하고, 사업발굴 및 금융협상 역량 강화
- (수은 특별계정\*) 既 조성 1조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추가 1조원 재원 조성을 통해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 추진
  - \* 국가신용도가 낮아(B+이하)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低신용국의 인프라 사업수주 지원을 위한 계정으로 '19~'21년간 1조원 既 조성

- (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\*) 1단계 지원(8천억원)을 적기 완료하고  
재원 추가조성을 통한 2단계 지원 추진

\* OECD 6~7등급 고위험국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무보 보험지원 프로그램으로 '20년 1,600억원 재원마련을 통해 8천억원 지원여력 既 확보

- (역량 강화) 수은 내 특별계정 전담조직 도입, 수은-무보간 협력  
채널\*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발굴 및 對발주처 협상력 제고

\* K-ECA 금융지원 오픈 플랫폼 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('21.4월)

### 1-3 주요 발주처 앞 기본여신약정\*(F/A) 확대

- 수은-UAE 국영 석유사(ADNOC)간 50억불 F/A\*를 우선 추진하고  
사우디(아람코)·카타르(QP) 등 대상기관 확대 추진(각 20~50억불)

\*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 거래에 대하여 표준화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

- F/A를 통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향후 발주처 추진사업에  
대한 우리기업 우위선점 및 수주 촉진 뒷받침

### 1-4 PIS펀드 조성 확대 및 실적 제고

- 글로벌 PIS펀드\*를 '21년 1.5조원 조성 완료(1단계)하고 이후  
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.5조원 확대(2단계) 추진

\* 플랜트·인프라·스마트시티 분야 투자 정책펀드로 1단계 1.5조원 조성 목표  
(공공 0.6, 민간투자 0.9조원) → 현재 1.1조원 조성(공공 0.6, 민간투자 0.5)

- PIS·GIF\* 등 정책펀드 운용 실적 제고를 위해 펀드 투자사업  
발굴을 지원하는 정례회의\*\* (분기별) 신설

\* 글로벌 인프라펀드, 1~7호 펀드까지 총 6,256억원 규모 既 조성

\*\* 국토부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펀드 운용기관, 수요기관 등 참여

## 1-5

## 수은 · 무보 보증 · 보험 지원 및 공동보증제도 개선

- **(수은)**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\*을 반영한 대외채무보증제도\*\* 개선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

\*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, 투자개발형 수주 사업, 국내금융기관의 참여 수요 확대 등

\*\* 수은법 시행령 상 ①사업별 지원금액의 50%이상 보증지원 불가, ②무역보험 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%까지만 금융보증 제공 가능

- **(무보)** 발주처에게 프로젝트 자금\*에 대한 수출보험 한도를 올해 3조원까지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

\* 코로나19 이후 각 국들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발주하고 있는 프로젝트 위주

- 그간 중동에 편중된 지원을 중남미, 아세안 등 신흥국\*으로 확대 (무보-멕시코 채무부간 10억불 금융제공 MOU 체결('21.5월))

- **(공동보증제도)** 중소·중견기업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-공동보증기관\*간 협의체를 통한 개선방안 강구

\* 수은, 무보, 산은, 서울보증보험, 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, 전기공사공제조합

## 1-6

## 경협증진자금(EDPF) 활용도 제고

- 수원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금리 적용 등 EDPF\*의 금리 경쟁력을 높이고, 차관 도입, 복합금융 활성화 등 자금 활용도 제고

\* EDCF 지원가능 대상국 중 수은 국별신용도등급 D2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저양허성 자금 지원(조달금리와 지원금리 간 차이는 정부재원으로 보전)

- 소득수준, 증여율 등 수원국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금리를 기존(2~3%)보다 낮은 방향으로 탄력 적용하고, 대상사업도 확대\*

\* 우리 직접수주 외에도 수주가능성 또는 진출기반 조성 효과가 있는 간접연계사업도 지원

- EDPF를 통한 프로그램 차관 도입\*을 검토하고, EDCF·MDB·수출금융 등과의 복합금융 활성화, PPP 사업 적극 발굴 등 자금 활용도 제고

\*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개도국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소요자금 차관 지원

## 2

##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

### 2-1

### 백신 접종, 법률 컨설팅 등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

□ 해외건설 기업애로 해소 TF(국토부 주관, 민간 건설기업 참여)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에 따른 애로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추진

○ (백신 우선접종) 해외건설 수주·계약 등 중요 경제활동으로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에 대한 백신접종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

- 단기(3개월 이내) 및 장기(1년 이상) 출장자 외에 3개월~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

- 중요한 사업적 행사(계약식, 투자 체결식 등) 참석을 위해 매우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\*

\* (기존) 신청~2차 접종 완료까지 3개월 소요 → (개선) 총 소요기간 1개월 이내 추진

○ (G2G 협의)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공기지연 관련 보상 협의, 입찰일정 조정, 예외적 입국허용 등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의\* 추진

\* 수주지원단 파견(대면), 화상면담, 발주처 대상 협조서한 발송 등

○ (법률컨설팅) 해외 건설기업의 불가피한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, 지체상금 등 분쟁에 대비토록 법률자문 지원 강화

- 지원내용을 해외건설 수행과정 전반적 사항으로 확대\*하고, 컨설팅 주요내용을 매뉴얼화\*\*하여 해외진출 건설기업에 제공

\* ('20년) 기업당 최대 6시간, 총 0.9억 → ('21년) 기업당 최대 12시간, 총 2.7억

\*\* 자문빈도가 많은 사항(코로나19 클레임 사례, 분쟁 대응방법 등)

## 2-2

###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

- 사업 타당성조사(F/S) 지원규모를 확대하고, 발주처 요청 사업 기획 및 제안형 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비용 지원 등 범위 확대
- (지원규모) 내년 F/S 지원을 확대하여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대응여력 강화
  - ※ '21년 F/S 지원규모: 국토부(KIND) 100억원, 산업부(플랜트산업협회 등) 65억원, 환경부(환경산업기술원) 55억원 / 수은도 자체자금으로 '20~'21년 105억원 지원
- (지원범위) 상대 발주처가 직접 요청(G2G)하는 PPP 사업 F/S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, 민간제안형 투자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도 지원(KIND)\*하여 대규모 사업참여 활성화
  - \* 제안서 작성시 기본설계 수준의 기술검토, 현지 법령·금융조사 등 많은 비용 (50~100억원)이 소요되어 기업들은 제안형 대규모 사업 참여에 소극적
  - ⇒ 사업제안 성공시 회수 등 조건으로 작성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효과 등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

## 3

### 핵심 프로젝트 집중관리 및 추가 프로젝트 발굴

- '20.6월 既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 등이 큰 10대 프로젝트(733억불)를 선별하여 수주성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
- \* 30대 프로젝트 중 4개 수주완료, 6개 철회, 1개 신규발굴로 현재 21개 프로젝트 관리중
-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사업 중요성(규모, 경제적 효과 등), 1~2년내 수주가능성 등 감안하여 신규 핵심 프로젝트 발굴 노력 강화

## 1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

### < 추진 필요성 >

◇ 동남아, 중남미 등 신흥국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획·운영 노하우와 많은 자금 조달이 소요되는 투자개발(PPP) 형태의 대규모 인프라 (공항·철도·신도시 등) 개발사업이 확대되는 추세

\* 주요국은 실적을 갖춘 ENG社(美·英·佛), 종합상사(日), 공기업(中)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 기획·선점

◇ 우리 인프라 공기업은 국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·운영 경험, 높은 대외 신인도 등을 보유 → 해외 PPP사업에 주도적 역할 가능

- '18년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(KIND)도 우리 기업의 투자 개발사업 지원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적 역할 필요

⇒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→ 글로벌 투자개발사업 수요증대 기회 확보

### 1-1 인프라 공기업 디벨로퍼 모범사례 축적

□ 분야별 공기업이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의 **Developer 역할**(총괄 기획/지분투자) 수행을 통해, **민간의 해외진출 견인**(동반진출 플랫폼)

○ 공기업이 기획·투자하는 동반진출(공공+민간) 해외 PPP사업을 **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, 모범 성공사례(Track Record)를 축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도모**

\* (동반진출 사례) 페루 친체로 공항 PMO, 카자흐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PPP사업

### < 인프라 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>

| 구 분          | 기 존                    | 개 선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기업<br>역할    | 주로 운영(O&M)단계<br>수행(수주) | 투자개발사업을 기획·제안하고 자금<br>조달하는 디벨로퍼(민간과 공동투자),<br>설계/시공 등 사업은 민간업체가 수행 |
| 사업발굴<br>지원전략 | 입찰형 사업 수주<br>필요시 지원    | G2G 협력 기반 제안형 투자사업<br>발굴·기획·개발·금융 쏙단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〈 분야별 해외사업 플랫폼 구축 〉



※ 인프라 공기업 외 인프라 공공연구기관(국토연, 교통연, 철기연, 도교원, 건기연 등)도 ODA 및 MDB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공기업의 사업개발을 측면 지원(연구기관-MDB[파견자] 간 정기 협의체 운영)

### 1-2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 위한 제도개선

□ **(예타 제도)** 공기업이 보다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·투자할 수 있도록 예타 관련 각종 제도 개선 추진

- MDB가 투자·보증에 참여하는 사업 또는 정부(수은 포함) 지원 F/S 완료 사업은 수익성 검증자료 검토하여 재무성 평가 시 우대
- 신속예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·예외 → 원칙 적용 방식\*으로 전환하고 특별 사유 없이 조사기간(2개월) 연장 금지

\* (현행) 시급 또는 선행사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 
→ (개정) 시급한 경우 예타 착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- 예타 신청 이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타기관(KDI)과의 예비협의\*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예타 진행의 효율성 확보

\* 사업계획 수립 단계사업 중 향후 2개월 이내 예타 신청 예정 사업

- 대외경제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도국 해외사업\*의 경우 예타 조사 종합평가(AHP) 단계에서 정책성 지표 우대

\* 신남방·신북방 등 정책 목적 사업으로 대경장 등 부총리 주재 회의체에서 의결된 사업



- (인사 제도) 해외 사업 특성(장기간+전문성)을 고려, 해외사업 전문 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해외사업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
- (평가 인센티브)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성과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경영평가 지표(주요사업) 설정시 수행 중인 해외사업(각 기관별) 반영

### 1-3

###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(KIND) 기능 강화

- (자본금) 증가하는 해외사업 투자수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KIND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 추진 검토
  - \* 현재 KIND 자본금은 3,936억원이며, '22년 법정 상한액(5천억원)에 도달 예정  
그간 12건 2.9억불 사업 既투자, 80여건 사업 투자 검토중으로 대응여력 확충 필요
- (인력 확충) 전문 인력 등 KIND 정원 단계적 확대 검토
- (금융자문·주선) 금융지원 조직 보강, 협력체계 확대 등을 통해 정책펀드, 자체투자, 외부금융 주선 등 '통합투자플랫폼' 역할 강화
  - (조직) 해외사업 금융모델링 등 전문성을 보강하고, KIND 내 금융자문·주선 전담 조직 강화
  - (금융협력 체계) EDCF-KIND간 공동기획 사업 발굴을 활성화 하고, KIND-MDB간 정례협의 확대
    - \* 현재 ADB, EBRD, CAF와 MOU 既체결 → 연내 AIIB, EIB, USIDFC와 신규 MOU 체결
- (해외협력센터) 방글라데시 등 사업개발 수요가 많은 주요 거점국가 대상으로 현지 중심 사업발굴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해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
  - \* 현재 신남북방 등 전략국가 진출 교두보 등을 위해 4개국(베트남, 인나, 우즈베크, 케냐)에 既설치



## 2

## 민간 역량 강화

### < 추진 필요성 >

- ◇ 우리 건설사들이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디벨로퍼 전환을 위한 노력중이나, 실적 부족 등에 따른 역량 형성 미흡 등 한계
  - 향후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서 우리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려면 고부가 영역인 PM(사업관리) 등에서 국내외 사업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+ 민관 해외 동반진출 사례 확대 필요
  - 아울러 역량강화의 기반이 되는 해외건설인력 양성 노력 강화 필요

### 2-1

### PM(Project Management, 사업관리) 역량 강화

- 건설 Eng 분야를 설계·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(사업관리)\*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 유도

\* PM(Project Management) :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수 과정(기획·조사·설계·조달·시공·감리 등) 또는 일부를 관리하며,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

- (법령 개정)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 Eng.(수과정)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PM을 도입\*하고 발주근거, 대가기준, 실적관리 방안 등 마련('22)

\* PM/CM(Construction Management)/감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각의 업무·책임 등 명시

- (시범사업)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추진('21~)하여 사업자 선정기준·대가·계약서 등 세부지침 마련 및 효과 검증

\* (1단계, '21) LH(설계 이후), 철도공단(설계부터) 건축 사업에 PM 도입 /  
(2단계, '22) 향후 토목 사업을 대상으로 수과정 PM 도입 추진

- (발주확대) 非 건설기관(지자체 등)의 PM 발주를 장려하고, 건설전문기관(LH, 도공 등)은 대규모 사업에 자문형 PM 도입\*

\* 발주처 역량에 따라 사업관리방식(대행형, 자문형)을 정하도록 검토 기준 마련

- 해외 PM 실적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(ODA) 활용을 검토하고, 홍보·네트워킹 강화, 정보제공 등을 통해 PM 해외진출 지원
  - (ODA 활용) 해외에서 발주되는 PM 용역 입찰시 ODA(EDCF 등)를 연계하여 기술이전, 역량강화 등을 지원
  - (네트워킹) GICC 등 국제행사시 해외 발주청, 기업 등을 초청해 국내기업의 PM사례, 기술력 등을 홍보하고 네트워킹 기회 제공
  - (정보제공) 해건협, 주재관을 통해 해당국 Eng. 제도, PM 등록 요건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해 영세 Eng.업체의 해외진출 지원

## 2-2

### 해외건설 인력 양성

- 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해외건설인력 및 주재관 등의 역량 확충
  - (계획수립) 해외건설인력의 중장기 수급 고려한 '인력양성계획' 수립('21.下)
  - (교육과정 확대) ①비대면 환경을 고려,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온라인 형태의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·제공
    - ②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\* 중 심화과정(법률·계약) 확대 등 교과 개선
  - \* 1년 과정(220시간/년)으로, '20년 충북대 선정·운영('20년 44명 수료, '21년 45명 선발)
  - (주재관 사전교육) 현지 공관을 통한 수주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해 해외파견 예정 주재관 대상 해외건설교육 신설\*
    - \* 국립외교원 주재관 사전 교육과정(2주)에 '해외건설 지원' 교육 추가

### 3

##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

### < 추진 필요성 >

◇ 우리 해외수주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**중동·아시아 등 기존 주력 지역** 기반을 공고히 하되, **시장다변화**를 통한 지역편중 점진적 완화 필요

\* 전체 해외수주 중 중동·아시아 비중(%): ('17) 99.3 ('18) 79.1 ('19) 77.5 ('20) 70.8

- 특히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(1.2조불) 등 미국 건설시장 기회 확보 및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긴요

### 3-1

##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 시장 진출기반 조성

- **(G2G 협력)**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제3국 공동진출, 우리 미국시장 진출 등 협력 논의 진전('21.下)

### ※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 진행 경과

- ▶ ('19.11월) 양국 재무부 간 실무회의를 통해 워킹그룹 구성
  - \* (韓) 기재부(대외국장 주재) 국토부, 산업부, 금융위, 수은, 산은, 무보, KIND 등
  - (美) 재무부(국제시장 차관보 주재) 국무부, 상무부, 에너지부, DFC 등
- ▶ ('20.2월) 워킹그룹 회의 및 민간참여 라운드테이블 개최
- ▶ ('21.1월) ①제3국 공동진출 및 ②금융시장 발전 관련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

- **(제3국 공동진출)** 아시아·중남미 지역 내 양국 관심분야 기반의 파일럿 사업 선정·추진
- **(미국 진출)** 미국 법령·제도(입찰, 인허가, 외국인투자, 노동·환경 규제 등) 가이드라인 공유, 양국 기업 파트너십\* 지원방안 등 논의
  - \* 美 건설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합작 또는 M&A 등 파트너십이 중요
- **(개발금융 협력)** 수은 - DFC, KIND-DFC 간 MOU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협력모델 개발 및 후보사업 발굴 추진('21.下)
- **(라운드테이블)** 양국 건설기업, 투자기관 등 대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('21.下)하고 매년 정례개최를 통해 민간부문 네트워크 구축 지원

- **(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)**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계획, 원전 부문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수주 기회 창출
  - **(대미투자)** 우리 기업의 미국 400억불 투자\* 계기 국내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한 실적 제고 및 양국 기업 파트너십 기회로 활용
    - \* (삼성전자) 신규 파운드리 공장 170억불, (LG에너지솔루션·SK이노베이션) 배터리 분야 투자 140억불, (현대차) 전기차 생산 및 충전 인프라 74억불, (하이닉스) R&D센터 10억불
  - **(원전 협력)** 양국 관심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하고, 시장별 진출방식 및 공급망 구성 등 협력방안 모색
- **(현지 지원조직 신설)**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한 (가칭) **‘미국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’** 신설(‘22년)
  - 美 인프라 정책·제도·전망 등 시장조사, 사업 파트너사·다자 개발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유망사업 발굴 등 지원
  - 현지 지원반 중심으로 ‘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교육과정’을 제작하여 진출 기업에 제공



### 3-2 개도국 대상 PPP 사업 EDCF 역할 강화

- EDCF가 사업 발굴·형성 등 **초 단계**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외수주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는 EDCF PPP 지원체계 정착
  - \* (기존) 관계부처·민간 등 외부 제안사업에 대해 개별 심사하는 수동적 접근 → (개선) 수주 가능성 등 감안하여 사업 발굴 단계부터 형성·설계 등 적극 지원

① **(사업 발굴)** 범부처 EDCF 사업컨설팅\* 및 전문기관 협의체, MDB 협조용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후보사업 Pool 확보

\* 관련 부처·기관과의 정례 협의를 통해 교통·보건 등 PPP 후보사업 현황, EDCF 연계수요 등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전문적 논의 유도

② **(사업 형성)** EDCF F/S 재원 및 여타재원 매칭\*을 통한 PPP 적합형 F/S 시행, 수주 가능한 사업에 대한 PPP 추진계획 별도 검토 등 지원 확대

\* (예시) EDCF 사업진행컨설팅 - KIND 타당성조사 지원 자금·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자금 등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PPP 사업 검토 지원

③ **(사업 실행)** PPP 관련 EDCF 내외부 기술역량을 확충\*하고 민자사업법인 앞 출자 등 신규 PPP 지원 사례 발굴 추진

\* (내부) EDCF 기술전문가 비중 점진적 확대 [현재 15명 → '25년 30명 이상]  
(외부) (보건) 보건산업진흥원, (토목) 도로기술사회 등 분야별 포괄자문계약 체결 추진

3-3

정부간 G2G 협력 강화

□ **(EIPP\*)** 3년 이상 중장기 집중자문 프로그램인 EIPP를 토대로 자문결과를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수주기회 극대화

\*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(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)

○ 우즈벡·인니 대상 EIPP 2차년도 심층자문을 통해 후속사업 연계방안을 모색하고, 케냐\*와의 신규 자문 착수('21.下)

\* '케냐 콘자(Konza)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화'를 주제로 세부 자문내용 협의 중

- 미얀마와의 EIPP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국가 협력 사업 신속 발굴

□ **(K-City Network)**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 지원 강화, 협력센터 추가 설치 등 K-City Network 협력 확대

○ K-City Network 국제공모 지원분야를 계획수립(MP, F/S)에서 해외 실증사업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 솔루션 해외에 확산

○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연내 1곳 추가 설치하여 사업수요 대응 강화

\* '20년 4개소(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, 터키) → '21년 5개소(사우디 신설)

## 1 해외수주협의회 역할 강화

- 해외수주협의회\*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, 논의 분야를 금번 대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분화하여 면밀하고 체계적인 점검 추진

\* 기재부 1차관 주재, 국토부·산업부·외교부 등 관계부처, 정책금융기관 등 참석

|      | 기존  | 개선  |
|------|---|---|
| 개최빈도 | 협의회(기재부 1차관 주재) : 年 1회<br>실무협의회(국장급) : 年 2회 | 협의회(기재부 1차관 주재) : 年 2회<br>실무협의회(국장급) : 年 4회(분기별)  |
| 논의내용 | 해외수주 현황 및 애로사항,<br>금융지원 방안 위주로 논의           | ⇒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 점검<br>① 공기업 투자개발사업(핵심프로젝트 포함)<br>② 수주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<br>③ 금융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<br>④ 주요국 G2G 협력 현황 |

- 해외수주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해외수주 점검 체계를 신설하여 정기적(분기별)으로 진행상황 점검

| 전통 인프라 |             | 에너지·플랜트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토부    | • 도로 (도로공사) | 산업부     | • 전력 (한전)<br>*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 포함 |
|        | • 철도 (철도공단) |         | • 가스 (가스공사)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• 공항 (공항공사)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• 도시개발 (LH) | 환경부     | • 댐 (수자원공사)                     |
| 해수부    | • 항만 (항만공사)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+

KIND / KOTRA / 프로젝트별 유관 민간기업 참여

## 2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

- 우리 해외수주 역량, 강점분야, 금융지원 등에 대한 주요국 주한 대사관 해외수주 설명회 분기별 개최(국토부·KIND·수은)
-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\*(11월, 국토부), MDB 프로젝트 플라자\*\*(11월, 기재부·산업부) 등을 통한 홍보 및 컨설팅 지원 강화
- \* 해외 주요 발주처를 방한초청하여 우리기업과 네트워킹 지원 및 인프라 역량 홍보
- \*\* 해외 발주처 및 주요 MDB 참여,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지원 및 기업 우수성 홍보
-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수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·제공하는 「(가칭)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」 구축(연내 1단계 구축 완료)

### Ⅲ. 과제별 추진 일정

| 과 제   | 일정                     | 담당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b>[전략1]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<b>1. 금융지원 강화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①-1)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  | '21.下~                 | 수은                 |
| ①-2) 저신용국 금융지원 2단계  | '22년 이후                | 수은, 무보             |
| ①-3) 주요 발주처 앞 기본여신약정(F/A) 확대  | '21.下~                 | 수은                 |
| ①-4) PIS펀드 조성 확대<br>PIS·GIF펀드 실적 제고   | '22년~<br>'21.下~        | 국토부, 기재부           |
| ①-5) 수은·무보 보증·보험지원 및 공동보증제도 개선  | '21.下~                 | 수은, 무보<br>보증참여기관 등 |
| ①-6) 경험증진자금(EDPF) 활용도 제고  | 계속                     | 수은                 |
| <b>2.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②-1) 백신 접종, 법률 컨설팅 등 기업활동 지원  | 계속                     | 국토부                |
| ②-2)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  | '22년~                  | 각 부처, 수은           |
| <b>3.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및 추가 프로젝트 발굴</b>  | 계속                     | 부처합동               |
| <b>[전략2]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</b>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<b>1.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</b>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①-1) 인프라 공기업 디벨로퍼 모범사례 축적   | '21.下~                 | 국토부<br>(인프라 공기업)   |
| ①-2)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  | '21.下~                 | 기재부                |
| ①-3)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(KIND) 기능 강화<br>-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<br>- 인력 확충 / 금융자문·주선 기능 강화<br>- 해외협력센터 추가 설치 | 법개정사<br>'21.下~<br>'22년 | 국토부, 기재부           |
| <b>2. 민간 역량 강화</b>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②-1) PM(사업관리) 역량강화<br>-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<br>- ODA 활용 및 네트워크·정보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1.下~<br>계속           | 국토부, 기재부           |
| ②-2) 해외건설 인력양성  | '21.下~                 | 국토부             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3.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</b>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[3]-1)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시장 진출기반 조성<br>- 한미 인프라 WG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<br>-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(대미투자, 원전협력)<br>- 현지 지원조직 신설 | '21.下<br>계속<br>'22년 | 기재부<br>산업부<br>국토부, 외교부   |
| [3]-2) 개도국 대상 PPP 사업 EDCF 역할 강화   | 계속                  | 기재부, 수은                  |
| [3]-3) 정부간 G2G 협력 강화(EIPP, K-City Network)  | 계속                  | 기재부(EIPP)<br>국토부(K-City) |
| <b>[ 추진체계 ]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</b>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[1] 해외수주협의회 역할 강화   | '21.下~              | 부처 합동                    |
| [2]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<br>- 주요국 주한 대사관 해외수주 설명회 개최<br>- 글로벌인프라협력 컨퍼런스, MDB 프로젝트 플라자<br>-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      | '21.下               | 국토부, 산업부,<br>외교부         |